

# 광주 택시요금 10월부터 13.3% 인상

심야할증 세분화·기본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 및 업계 안정 기대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3.3%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의회 의결 수렴을 거쳤다.

이 조치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상승하고, 기본거리도 2km에서 1.7km로 단축된다. 거리 요금 단위도 134m에서 132m로 줄어 장거리 이용 시 요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7월 2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 열린 시민공청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택사업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일반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택시 요금 현실화와 시민 부담간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는 택시 운송원가 상승, 임금 인상, 유류비 증가 등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일부 시민들은 물가 부담 확대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염려했다.

광주에서 개인택시를 12년째 운전 중인 이모 씨(58)는 “오래된 차량 유지비 증가와 유류비 부담으로 힘들었다”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 시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운전자인 김모 씨(45)는 “몇 년간 운임 동결로 경영상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가 잘 반영되어 택사업계가 안정되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 B씨(34)는 “택시비가 오르면 서민층 부담이 커질 테니,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중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현행 심야할증 시간 및 비율도 조정된다.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일괄 20%였던 할증은 23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30%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0%로 세분화되어 심야 시간이 한 시간 빨라지고 새벽 시간대 요금 부담은 다소 높아진다. 인접 지역에 해당하는 담양, 장성, 함평, 나주 등 시계 외 할증 비율도 기존 35%에서 40%로 오르며,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이 복합 적용될 경우 최고 50% 요금이 부과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도 기본요금이 2km 5,100원에서 1.7km 5,400원으로 올라가며, 거리요금 부과 기준도 156m에서 149m로 단축된다. 또한 심야 및 사업구역 외 할증이 신설되어 심야 시간과 지역 외 운행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임금 상승과 유류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증가한 운송원가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로, 광주시는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동결로 어려움이 이어져 온 만큼 인상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가의 면허 가격과 차량 유지비 부담이



운수종사자 폭염 극복 생수 나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유스퀘어 광장 앞 시내버스·택시 하차장에서 열린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사)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주최·주관으로 협의회 회원과 버스조합,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홍석기자

여전히 크며 추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택시 감차 정책, 불법 콜택시 단속 강화, 플랫폼 택시 운영 효율화 등 각종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친환경 전기 택시 보급 확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등 미래 지향적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 품질 개선 간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부 시민들은 대중교통 전반의 혁신과 함께 택시 서비스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홍석기자

광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요금 조정과 서비스 개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업계가 함께 상생하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상안은 9월 중 광주 물가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보고 후 10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한편, 3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은 약 800~900% 인상된 반면, 택시요금은 300%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홍석기자

# 광주·전남 PM 사고 줄었지만 사망사고만큼은 해마다 반복

사고 줄었는데 사망 위험 여전 안전관리 공백 청년 피해 반복

광주·전남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70건에서 2023년 144건으로 줄었으며, 이어 2024년에는 129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2년 만에 전체 사고 건수가 24%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 캠페인과 단속 강화, 시민들의 경각심 향상 등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추이를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광주는 2022년 92건에서 2023년 111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줄어들며 2년 사이 약 17%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이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22년 78건에서 2023년에는 33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인 2024년에는 다시 53건으로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성상 규제와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PM은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전동 휠 등 소형 전동 이동수단을 통칭한다. 대중교통 환승이나 가까운 거리 이동에 편리해 사용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차체가 작고 충격을 흡수할

보호 장치가 부족해 사고 시 피해가 일반 차량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단순 경상으로 끝나지 않고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빈번하다.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만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만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다. 전남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3년간 매년 1명 이상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가 단순한 ‘빈도’의 문제를 넘어, 사고의 ‘심각성’이 더욱 본질적인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제도적 장치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유업 형태로 진입이 가능해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사후 검증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의무 신고나 등록이 없어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면허검증 시스템을 전 업체에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의 규제 수준으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안전모 착용 등 탑승자의 의무사항과 함께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창덕기자



지난해 전남GT 대회 그리드워크

/전남도

#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전남GT’ 20일 개막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장 가상레이싱 축하공연 등 다채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도 매년 개최하는 ‘2025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다양한 레이싱 종목들이 참여해 뛰어난 경주 실력을 겨루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남GT 대회는 매년 약 1만 1천여

명의 관람객이 경주장을 방문하며, 선수와 대회 관계자 3천여 명 중 약 86%가 타지역에서 방문해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특히 지역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일요일에 집중돼 있던 개막식과 결승전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산 개최한다. 토요일에는 개막식과 한 개 종목의 결승전을, 일요일에는 다섯 개 종목의 결승전을 진행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2025 전남GT 대회는 스피드 축제를 선도하는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구레이스 ‘

전남내구’를 비롯해 최고 수준의 프로 대회인 ‘도요타 가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 고성능 차량이 출전하는 ‘스포츠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 등이 포함된다. 참가 선수 모집과 운영 인력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경주장 진입도로의 풀 깎기 작업과 서킷 노면 도색 등 경주장 환경 정비도 한창이다. 경주대회 외에도 문화와 레이싱이 어우러진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인기 가수 원슈타인과 마이트마우스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가상레이싱 체험, 카트 체험, 미니카 경주, 버블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대회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안전한 경기 운영으로 많은 관람객과 선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시간 내구레이스 ‘전남내구’와 ‘도요타 가주 레이싱 6000’ 종목에서는 극적인 경기가 펼쳐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온 모터스포츠 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올해 대회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jngt.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인 그랜드 스탠드에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창덕기자

# 광주 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은 ‘사실’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자원회수시설 사업 추진 차질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광산구 삼계동 지역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 혐의를 받는 주민들과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산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찾기 위해 3차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기준은 까다로웠는데, 최종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과반 동의’를 충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총 88세대가 거주하는 삼계동은 48세대가 찬성 의사를 밝혀 응모 요건을 충족했고,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그러나 동의 명단에 포함된 일부 세대의 거주 형태가 문제로 떠오르며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입지 절차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신

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경 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장 전입에 관련한 혐의자뿐 아니라 입지를 신청한 당사자까지 고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행정 절차 지연이다. 검찰 송치에 이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시는 입지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는 동시에 조건부 재공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건부 재공고란 사법부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하며, 현재 법률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환경 정책 측면에서도 부담은 크다.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쓰레기 소각장을 넘어 에너지 재활용과 지역 환경 개선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 불신이 생기면 주민 반발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했다. /고홍석기자